

헌 법

문 1. 직업공무원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업공무원제도란 정권교체에 따른 국가작용의 중단과 혼란을 예방하고 일관성 있는 공무수행의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는 공직구조에 관한 제도이다.
- ② 직업공무원제에서 말하는 공무원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근로 관계를 맺고 이른바 공법상 특별권력관계 내지 특별행정법관계 아래 공무를 담당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협의의 공무원을 의미하고 정치적 공무원이나 임시적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직업공무원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적 보장 중의 하나로서 입법자는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하여 '최대한 보장'의 원칙하에서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 ④ 직업공무원제도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정 정당이나 특정 상급자를 위하여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법에 따라 그 소임을 다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기능의 측면에서 정치적 안정의 유지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문 2. 통신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미결수용자가 교정시설 내에서 규율위반 행위를 이유로 금치 처분을 받은 경우 금치 기간 중 서신수수·접견·전화통화를 제한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② 국가기관의 감청설비 보유·사용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을지라도, 국가기관이 인가 없이 감청설비를 보유·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국가기관에 의한 통신비밀 침해행위를 예상할 수 있으므로 국가기관이 감청설비의 보유 및 사용에 있어서 주무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③ 신병훈련소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동안 신병의 전화사용을 통제하는 육군 신병교육지침서는 통신의 자유를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④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한 검증조서의 증거능력은 인정 되지 않는다.

문 3. 헌법의 인적 또는 장소적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독도 등을 중간수역으로 정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직접 규정한 것이 아니고, 독도의 영유권 문제나 영해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헌법상 영토조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 ② 1954년 헌법은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 사항에 관하여 국회의 가결을 거친 후 국민투표로 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 ③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며,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수역의 경우에는 12해리 이내에서 영해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④ 북한주민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위로금 지급 제외대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한다.

문 4. 형사보상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사피의자로 구금되었다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은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형사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을 경우 법원은 보상청구의 전부를 인용하여야 한다.
- ④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빼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문 5. 청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는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이다.
- ② 헌법에서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만을 규정하므로 국가 기관은 청원에 대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 ③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어서, 지방 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청원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④ 청원이 「청원법」상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되지 아니하는 경우 청원인은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문 6. 선거권을 가지고 선거일 전 30일 현재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재외국민 **甲**이 미국에 거주하면서 행사할 수 있는 참정권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7. 대통령선거권

2.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권

- ㉔.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권

ㄷ.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권

- ① \neg
② \neg, \perp
③ \neg, \sqsubset
④ \perp, \sqsubset

문 7. 종업원의 복리를 위하여 기업체 A가 출연하여 설립한 자율형 사립고 B는 2014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작성하면서, A기업 임직원 자녀 전형 70%, 사회배려자 전형 20%, 일반전형 10%를 각각 배정하였다. 2013. 9. 13. B가 관할 교육감으로부터 신입생 모집요강을 승인받아, 2013. 9. 16. 모집요강을 공고하자 A기업 임직원이 아닌 일반인 甲과 2015년 졸업예정자인 甲의 아들 중학생 乙은 2013. 12. 3. 이 내용을 알게 되어 2014. 2. 24. B와 관할 교육감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례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은 것은?

- ① B의 신입생 모집요강이 A기업 임직원 자녀 전형에 70%를 배정하고 일반전형에 10%를 배정하여 모집비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이어서 乙을 불합리하게 차별한 것이다.
- ② 乙은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아 乙의 청구는 부적법하다.
- ③ 乙의 교육 받을 권리의 제한은 문제되지 아니한다.
- ④ 乙은 교육감의 신입생 모집요강 승인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문 8.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은 것은?

- ① 「주민등록법」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 주민등록번호 불법 유출 등을 원인으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 ②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하고 졸업할 때까지 보존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가해학생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 ③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일률적으로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 ④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수사경력자료를 최장 5년까지 보존하도록 하는 것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문 9. 헌법상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학교운영지원비를 학교회계 세입항목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31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② 조세의 부과·징수로 인해 납세의무자의 사유재산에 관한 이용·수익·처분권이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
- ③ 국방의 의무는 「병역법」에 의하여 군복무에 임하는 등의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향토예비군 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등에 의한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도 포함하며, 병력형성 이후 군 작전 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도 포함한다.
- ④ 헌법 제39조제2항의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라는 단순한 사실상·경제상의 불이익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불이익을 의미한다.

문 10.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의원 선거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심판청구 이후 국가가 국회의원 선거구를 확정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주관적 목적이 달성되었다 할지라도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어 권리보호 이익이 존재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장을 위한 별도의 퇴직급여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지만, 헌법해석상 입법적 의무가 도출되지 않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③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3항의 위임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43조가 의무교육인 초·중등학교의 교육과목을 규정함에 있어 헌법 과목을 의무교육과정의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도록 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④ 구「태평양전쟁 전후 국의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대한 심판청구는 평등원칙의 관점에서 입법자가 동법률의 위로금 적용대상에 ‘국내’ 강제동원자도 ‘국외’ 강제동원자와 같이 포함시켰어야 한다는 주장에 터잡은 것이므로, 이는 위로금 지급대상인 일제하 강제동원자의 범위를 불완전하게 규율하고 있는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헌법소원으로 보아야 한다.

문 11.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광명시가 고등학교 비평준화 지역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는 신뢰는 헌법상 보호하여야 할 가치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교육감이 추천에 의하여 고등학교를 배정하는 지역에 광명시를 포함시킨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② 저작인접권이 소멸된 음원을 무상으로 이용하여 음반을 제작·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오던 사업자가 소멸한 저작인접권을 회복시키는 입법으로 인하여 이를 할 수 없게 되었다라도, 2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음반 제작·판매업자로서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③ PC방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부칙조항을 통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유예한 「국민건강증진법」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④ 무기징역의 집행 중에 있는 자의 가석방 요건을 종전의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 형 집행 경과로 강화한 개정 「형법」 조항을 「형법」 개정 당시에 이미 수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하는 「형법」 부칙 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문 12. 집회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집회란 다수인이 일정한 장소에서 공동목적을 가지고 회합하는 일시적인 결합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2인이 모인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② 일몰시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 특별히 공공의 질서 내지 법적 평화를 침해할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됨이 명백하다.
- ③ 헌법 제21조제2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허가'는 '행정청이 주체가 되어 집회의 허용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는 것'으로 법률적 제한이 실질적으로 행정청의 허가 없는 옥외집회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면 헌법상 금지되는 사전허가제에 해당하지만, 그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헌법 제21조제2항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 ④ 동시에 접수된 두 개의 옥외집회 신고서에 대하여 관할 경찰 관서장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접수 순위를 확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폭력사태 발생이 우려되고 상호 충돌을 피한다는 이유로 모두 반려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문 13.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제105호 조약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바가 없고, 헌법 제6조제1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헌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위헌성 심사의 척도가 될 수 없다.
- ② 헌법 제6조제1항의 국제법 존중주의에 따라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에 우선한다.
- ③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 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④ 마라케쉬협정은 적법하게 체결·공포된 조약이므로 이 협정에 의하여 관세법위반자의 처벌이 가중되어도 위헌은 아니다.

문 14.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서울광장으로 출입하고 통행하는 행위를 제지하는 것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
- ② 대한민국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에는 대한민국을 떠날 수 있는 출국의 자유와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 올 수 있는 입국의 자유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국적 변경의 자유가 포함된다.
- ③ 이른바 세입자입주권의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현 거주지에서 세입자카드가 발급될 때까지 살아야 한다."라는 조건을 붙였다면 계약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약정되었다 하더라도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 ④ 한약업사의 허가 및 영업행위에 대하여 지역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문 15. 조세와 부담금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의무교육이 아닌 중등교육에 관한 교육재정과 관련하여 재정 조달목적의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수분양자들의 구체적 사정을 거의 고려하지 않은 채 수분양자 모두를 일괄적으로 동일한 의무집단에 포함시켜 동일한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 ② 내국인 국외여행자에게 2만원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도록 한 국외여행자 납부금은 내국인 중 국외여행자라는 특정집단에게 부과된 재정 부담 및 유도적 성격을 지닌 특별부담금이다.
- ③ 먹는 샘물 수입판매업자에게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수도물 우선정책에 반하는 수입 먹는 샘물의 보급 및 소비를 억제하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④ 텔레비전 수신료는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의무적으로 징수되고 있는 실질적인 조세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의 형식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문 16. 국회의 권한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ㄴ.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ㄷ.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하게 한다.
- ㄹ. 대통령의 탄핵소추사유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로
제한되고,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서 소추 사유가
되지 않는다.
- ㅁ.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국회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지만, 그 해임건의는
대통령에게 법적 구속력이 없다.

	ㄱ	ㄴ	ㄷ	ㄹ	ㅁ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문 17. 기본권경합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은 것은?

- ① 수용자가 작성한 집필문의 외부반출을 불허하고 이를 영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 ② 종교단체가 양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종교단체의 종교의 자유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한한다.
- ③ 일반음식점 영업소에 음식점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하여 운영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음식점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음식점 시설에 대한 재산권을 제한한다.
- ④ 형제·자매에게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교부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본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 이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판단하지 않는다.

문 18.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대통령은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하고,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가 발생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 ②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 ③ 사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장관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3명 이상을 위촉하여야 한다.
- ④ 헌법 제86조제2항 및 제94조에서 말하는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는 입법권자가 헌법 제96조의 위임을 받은 「정부
조직법」 제26조에 의하여 설치하는 행정각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문 19. A와 B는 공유수면인 C해역에 인접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A 지방자치단체장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간한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여 공유수면 중 일부해역에 대하여
D조합에 어업면허처분을 하였다. B는 A 지방자치단체장의 어업
면허처분이 자신의 자치권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례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은 것은?

- ① 어업면허사무가 자치사무일 경우 B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자격이 인정된다.
- ②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공유수면에 대한 불문법상
해상구역의 경계로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판례이다.
- ③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는 A와 B가 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공유수면에 미치지 않으므로 B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문 20. 대한민국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1948년 헌법은 평등권, 신체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비롯한 고전적 기본권을 보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로 3권과 사기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이익분배권점권,
생활무능력자의 보호,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의
특별한 보호 등 일련의 사회적 기본권까지 규정하여
사회주의적 요소를 가미하였다.
- ㄴ. 1954년 헌법개정안에 대한 표결결과 민의원 재적의원
203명 중 135명이 찬성하여 헌법 개정 필요 의결
정족수인 3분의 2이상의 찬성이라는 기준에 한 표가
모자랐지만 이른바 사사오입(四捨五入)이라는 계산법을
적용하여 부결선표를 반복하고 가결로 선포하였다.
- ㄷ. 1954년 헌법에서는 대통령, 민의원 또는 참의원의 재적
의원 3분의 1이상 또는 민의원 의원선거권자 50만인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 개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960년 제3차 헌법 개정에서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처음 규정하였다.
- ㄹ. 1962년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규정을, 1980년
헌법은 국가가 근로자의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할 의무와 환경권을, 그리고 현행 헌법인 1987년 헌법은
국가가 최저임금제를 시행할 의무를 규정하였다.

- ① ㄱ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ㄴ, ㄷ, ㄹ